

##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부 ‘조건부 협의’ 결정

환경부, 어제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서 의견 통보  
“상위 계획과 부합하고, 반려 사유도 적정하게 보완”  
후보지 선정 8년 만 2공항 사업 착수 추동력 확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따라 후보지 선정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5면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5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즉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물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가 2021년 7월 제출한 전략영향평가서에 대

해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습골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제2공항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습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사실상 허가하면서 향후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기본계획 고시 전 계획안에 대해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오영훈 지사가 6일 제2공항 관련 환경부의 발표가 이뤄진 직후 브리핑을 위해 굳은 표정으로 제주도청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모습. 강희만기자

### “진행 과정에서 제주 배제 유감”

오영훈 제주도지사 6일 제주도청서 관련 브리핑  
“일방적 결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 찾겠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결론에 대해 “결정 여부를 떠나 진행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배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합리적인 추진 과정·투명한 정보 공개·도민 의견 수렴 절차”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지사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이후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

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히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 대해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환경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오 지사는 또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의 경우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도민 갈등에 대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나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4면 / 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상승률... 6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도, 4대 전략·17개 과제 선정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대 전략과제,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및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제고와 대기업과의 해외진출 협력관계 증진에 나선다.

또 해외건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동향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내 설명회 개최, 개별업체별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지원한다.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를 적극 활용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업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공공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도는 올해 건설사업예산 총 2조 5259억 원 중 상반기에 61%인 1조 540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70%→80%)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百里百景〉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展  
- 가을 따라, 풍광 따라

일시 2023. 2. 21(화) ~ 3.10(금)  
장소 갤러리ED (한라일보 1층)  
관람시간은 10:00~18:00입니다

| 관람문의 | 064-750-2543